

함께 뛰는 대한민국 새판 경제

# 국민성장시대



# 국민성장시대

## 국민 모두가 성장하며 서로 키우는 협력적 시장경제

‘국민성장시대’는 개인이 각자의 영역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힘찬 시장경제입니다. 그 힘이 부족한 곳에는 다른 선한 에너지가 투입돼 보충하며 국민 모두가 성장하고 서로 키우는 협력적 시장경제입니다. 스스로를 먼저 일으키고 옆 사람에 손 내밀어 함께 뛰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판’입니다.

지금 안팎으로 나라가 불안합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통상 질서도 걱정이지만 오랫동안 끓아온 우리 안의 문제가 더 큰 위협입니다. 첨단산업을 주도할 기술력도 뒤쳐지고 그간 한국경제를 떠받쳐온 기간산업들도 붕괴 직전입니다.

10여년 후에는 0%대의 성장률이 뉴노멀이 될 것이라 예측됩니다. 왜 우리가 주저앉고 있는지 원인을 직시하고 쇠신하는 ‘내안의 혁명’이 절실합니다.

그런데도 의석을 독점한 다수당은 ‘쇄신 아닌 분철’로 경제를 더 끌어 내리려 합니다. 청년들을 절망케 하는 노동시장 불공정을 더 조장하고, 열심히 해보려는 이들의 뒷다리를 잡는 규제를 결사 수호합니다. 나라가 아니라 강성노조를 위한 정치입니다.

그러면서 첨단기업을 정부가 키워 국민에게 이익을 나눠준다고 선전합니다. 언뜻 들으면 혹하지만 이런 관치분배경제 하에서는 글로벌 기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뛰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 지분의 기업이 성공한 거의 유일한 사례인 대만 TSMC마저도 38년간 계엄이 지속된 독재국가 때 만들어졌고 민주화 후에는 지분을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첨단 선진 경제를 꿈꾸는 대한민국에서 퇴행적 정치가 관치분배모형을 다시 소환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정작 중요한 것은 과거 정권들이 등한시켰거나 무능해서 못 풀 구조적 문제를 사즉생의 각오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정치와 경제의 새판을 짤 때입니다.



# 세계 제일의 AI 강국, 세계에서 제일 기업하기 좋은 나라



‘국부는 기업이 창출한다’는 명제에 모든 정치세력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막상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익을 내면 국민 다수가 나눠갖겠다고 공언하는 반시장적 정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신산업정책의 시대입니다. AI를 비롯한 첨단기업은 불확실성이 크고 초기자본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기금을 만들어 투자도 하고 인프라도 지원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국민세금으로 투자하고 지원하는건 상대적으로 쉬운 일입니다. 훨씬 더 어렵지만 절박한 일은 기업이 될 수 있게 토양을 만드는 일입니다. K-엔비디아를 만들자고들 하지만 그걸 위해서는 엔비디아가 있는 미국보다 더 좋은 토양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토양이 형편없습니다. 우리나라였다면 엔비디아 젠슨황 사장은 주52시간 근로 위반 한가지만으로도 감옥살이를 오래 했을 겁니다. 그토록 경직적인 규제를 고수하기 위해 반도체 특별법 하나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첨단기업을 떠드는 것은 허풍을 넘어 기만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국회에는 AI 관련 규제법안이 수북히 쌓이고 있습니다. 이러니 스타트업 기업이 외국으로 앞다퉈 탈출해 ‘K-엑소더스’가 진행 중입니다. 전세계에서 성업 중인 유니콘 기업 중 다수가 우리나라에선 불법이라 발도 붙이지 못했습니다.

AI 시대에 앞서려거든 ‘AI 전세계 1등 국가’가 되겠다는 각오부터 하고 세계에서 제일 기업하기 좋은 환경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AI는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제품과 결합할 수 있는 만큼,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겁 없이 세상에 나오고 시도되도록 규제장벽부터 허무는 게 급선무입니다.

## ☑ 정책 대전환

- AI에서 앞서가는 선진국(미국,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에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를 모두 없애는 제도 개선
- 질낮은 규제를 양산하는 국회의 의원 입법에 ‘규제영향평가’ 도입
- 규제샌드박스(일정한 지역·기간·규모 내에서 규제를 면제해 제도개선 필요를 가늠하는 제도) 지정 과제는 1년 이내 법 개정
- R&D 사업 성실실패는 감사 면책하고 민간연계 강화해 제품화 촉진
- 혁신적 중소·중견기업 지원시 민간컨설팅 기법(비스포크) 활용해 효과성 제고

# 청년이 웃고 꿈꾸는 나라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철저한 15:85 구조입니다. 청년들은 상층의 15%, 즉 대기업 정규직과 공공부문에 취업하고 싶어 하지만 '귀족노조와 정치의 유착'은 청년들의 진입로를 철저히 봉쇄하고 기득권을 보호합니다. 정치권력과 노조권력이 손잡고 청년을 좌절시키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2021년 대법원의 현대중공업 판결은 대기업이 얼마나 강력한 철밥통인지 보여줍니다. 7년간 인사평가에서 3,859명 중 3,859위, 3,857위를 했고 10개월간의 직무재배치 교육 후에도 개선이 없었던 두명이 해고됐는데, 대법원 판결까지 5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런 마찰을 겁내는 대기업이 신규직원 채용을 기피하니 청년들만 피해를 봅니다.

보수체제도 불공정합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는 잘하든 못하든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에 따라 보수가 딱딱딱 올라 갑니다. 정년에 도달한 사람과 신입의 차이가 3배, OECD 최악의 연공급입니다. 그러니 학교를 졸업하면 대기업에 들어가려 갖은 애를 쓰고, 그러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실패자 취급을 받습니다. 시작점이 어디든 열심히 하면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이 없는 나라에서 진입로까지 막아놨으니 청년들 고개가 떨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와 강성 노조의 '반청년 결탁구조'를 박살내야 청년이 삽니다.



## ☑ 정책 대전환

-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이동사다리를 만들어 연10% 이상 수시로 이동하도록 해 이중구조의 담을 허물고 '노력하면 보상 받는다'는 원칙을 구현
- 임금총액을 줄이지 않는 임금체계 개편은 노조 동의 없이도 '협약'로 가능하도록 법 개정
- 공무원 포함한 공공부문부터 신입 대비 정년도달근로자 임금이 2배 미만(선진국 수준)이 되도록 임금체계 개혁
- 하청 계약시 원하청 간 1인당 임금격차를 20% 미만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원하청 격차 신호등 제도'를 마련해 빨간불이 들어올 경우 '보수차별여부 조사'의무를 정부에 부여
- 정년도달시 일단 퇴직 후 생산성에 비례해 임금을 책정하는 재고용
- 내 일과 삶에 딱 맞는 슬기로운 52시간제로 청년의 시간주권 보장



# 다정한 사회, 연결사회로 전환



너무나 빨리 발전한 대한민국은 지금 고소공포증을 앓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혼자 올라 막막해하는 사람처럼 고립된 개인들이 각자 도생의 강박에 붙잡혀 있습니다. 인터넷 기술이 발달해 초연결사회라 하지만, 그 이면에는 스마트폰 독실에 갇힌 개인들이 각자 떨어져 단절돼 있습니다.

이는 어느 한세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대의 문제입니다. 고립은둔 청년이 2022년 2.4%에서 2024년 5.2%로 두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고독사가 청년과 노인 모두에서 늘어나고 중년의 우울증과 인간관계 단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마음의 힘이 고갈된 사회에서 힘찬 시장경제를 바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교류하며 그 교류가 협력과 활력이 되는 '정 있는 시장경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이제 '다정함'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자산을 쌓아야 합니다. '다정함'이란 당장 닷친 승부와 이익에 초조하게 매달리는 대신, 한 걸음 물러나 타인을 존중하고 친절하게 관계를 쌓아 가는 자세입니다.

창업가이자 소설 '레드 헬리콥터'의 저자인 제임스 리는 '다정함'이라는 각도에서 개인과 사회의 균형을 조정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지속가능 모델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노사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모두가 생사를 건 것처럼 제로섬 경쟁에 매몰된 사회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성장할 '마음의 힘'이 없습니다.

다정함으로 연결된 사회를 위해서는 각자가 자신의 선한 부분을 타인에게 개방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돕고 칭찬하는 국가 정책이 필요합니다. '다정함'의 플랫폼을 깔아야 할 때입니다.

## ☑ 정책 대전환

- 국방의 의무로 18개월간 복무하는 남성처럼 성인기에 들어선 여성도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복무할 기회를 부여하고, 공공부문 채용 가산점을 이틀 넘겨 모두에 부여
- 자취방이 필요한 대학생들에게 본인 주거지 내 남는 방을 제공할 경우 임대소득 면세
- 고립·단절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대처한다는 원칙으로 대통령 직속 '다정한 사회 위원회'를 신설하고, 실태조사와 통계인프라, 중앙과 지방정부간·부처간 협업체계 등 정책기반 구축(영국은 2018년 외로움부 신설, 일본은 2021년 고독·고립 전담 장관과 대응체계 구축)

# 일자리·주거·교육·문화 기반이 충족된 메가시티 창조



이러다간 수도권밖에 남지 않겠다는 걱정이 만연해 있습니다. 지식기반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아이디어가 중요한데 이는 사람과 기업이 밀도높게 모여 소통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인재들이 많은 곳에 기업이 집중되고, 기업이 많은 수도권에 일자리가 많아 지방의 구직청년들이 모여듭니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집값상승과 과밀로 몸살을 앓고 청년이 유출되고 고령인구만 남는 지역은 지역대로 공동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방소멸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수도권 밖에도 일자리와 매력 있는 메가시티를 우선 한 개라도 성공시켜야 합니다. 일자리와 정주여건이 수도권만큼 좋은 지역을 성공시키는 사례가 만들어져야 또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만의 노력으로도 중앙정부의 주도만으로도 이룰 수 없는 목표입니다. 일단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중앙정부의 파격적인 도움이 제공될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돼야 합니다. 그런 후 중앙과의 긴밀한 소통에 기반해서 지자체들이 기획력을 발휘하고 힘을 모아, 지자체 간의 협력적 의사결정체계와 지역간 연결 계획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가능해집니다.



## ☑ 정책 대전환

- 지자체 연합의 메가시티(지역연합으로 이루어진 대도시권) 구상이 마련 되면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국고보조를 대폭 인상하고 이전 기업에 전폭적인 세제지원 (법인세·소득세·취득세·상속세 등)
- 대한민국 재점화특구 프로젝트: '경쟁력 있는 기업의 특구 유치에 필요한 각종(노동·기업·교육) 규제 특례와 산업기반 구축 기획'을 시·도지사가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 수도권 거주 인구가 지방에 추가적 주택을 구입할 경우 세제 혜택, 빈집 리모델링 비용 지원, 고령자의 지방 이주시에도 주택연금 계속 보장 등으로 4도3촌 증진하고 지방의 생활인구 증대